



안보전략논단

www.korva.or.kr

| 발행인: 신상태 | 편집인: 이화수 |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Vol.37(24-3) | 2024. 3. 4

제대군인 지원에 AI를 활용하자
권영태

2년간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6·25의 기억
박동순

재향군인회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제언
이종섭

제대군인 지원에 AI를 활용하자

권영태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북한개발연구소 이사)

제대군인 지원에 AI를 활용하자

대한민국의 국방은 국민의 헌신과 희생 위에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어 매년 많은 청년이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온다. 이들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고 취업, 창업, 교육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정부와 민간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제대군인들은 취업, 주거,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제대군인 지원 분야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AI는 제대군인의 개인별 특성과 상황을 분석하여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24시간 365일 이용 가능한 비대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AI를 활용하여 제대군인의 취업률을 높이고, 창업 성공 가능성을 증대시키며, 사회 적응을 돕는 데 활용할 수 있다. AI를 활용한 제대군인 지원의 주요 방향은 다음

과 같다. 우선,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이다. AI는 제대군인의 군 복무 경험, 학력, 기술, 직업적 관심 등을 분석하여 개인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분야에 대한 높은 기술을 보유한 제대군인에게는 해당 분야의 취업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제대군인에게는 사업 계획 수립 및 투자 유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다음으로 24시간 365일 이용 가능한 비대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AI 기반 챗봇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대군인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챗봇은 제대군인의 질문에 답변하고, 행정 절차 안내, 상담 예약, 취업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취창업 성공 가능성 증대에 활용할 수 있다. AI는 제대군인의 역량과 기업의 채용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적합한 기업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AI 기반 면접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통해 제대군인이 면접 기술을 향상시키도록 도울 수 있다. AI는 창업 아이템 발굴, 사업 계획 수립, 투자 유치, 마케팅 등 창업 과정의 전반에 걸쳐 제대군인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물론 제대 군인의 사회 적응 지원에도 AI는 도움이 된다. AI는 제대군인의 사회 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AI 기반 상담 시스템을 통해 제대군인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회생활 적응을 위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제대군인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지원책 이외에도 간접적으로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AI는 활용 가능하다. 제대군인의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AI를 활용하여 제대군인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제대 군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제대군인의 성공 사례를 홍보하고, 사회 기여 활동을 지원하는 데 AI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정책 담당자들은 제대군인 정책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AI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AI는 유능한 참모이자 비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효과 분석, 대상 만족도 조사, 정책 간 연계성 분석 등을 통해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AI 기술을 쓸 수 있다.

제대군인 정책 수립과 평가에 제대군인들이 AI를 통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 제대군인 정책 수립과 평가 과정에 제대군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제대군인 의견 수렴 시스템 구축, 정책 자문위원회 참여, 정책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제대군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기술적 톨로서 AI는 유용하다. AI는 제대군인 지원 분야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AI를 적극 활용하여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한다면,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민간은 AI 기술 개발 및 활용에 투자하고, 관련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여 AI 기반 제대군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년간의 러시아 - 우크라이나전쟁과 6·25의 기억

박 동 순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논문심사위원)

(한성대학교 교수, 국방대학원 안보정책학과장)

러-우전쟁 배경과 한국의 인식

2022년 2월 24일,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진행할 것”을 선언하여 전쟁이 시작되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로서 우크라이나의 위협을 용인할 수 없으며, 작전의 목표는 돈바스 주민 보호"라고 말했다. 전쟁의 가장 큰 원인을 꼽자면 나토 동진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미국 중심의 유럽 집단안보체제 가입하는 것에 대해 러시아가 위협을 느끼게 된 점이다. 또한 장기 집권을 꿈꾸는 푸틴 대통령의 과거 러시아제국과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의 영화를 되찾으려는 야심도 작용했다.

우크라이나는 “자연으로부터 축복받은 땅이자 역사로부터 저주받은 땅”으로 불렸고, 지정학적으로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유라시아 대륙의 요충지다. 반면 러시아는 근현대사를 통틀어 손꼽히는 세계적 강대국으로 유럽과 아시아대륙에 걸쳐 가장 광대한 영토와 세계 제2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다.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미국과 쌍벽을 이룰 만큼 강대국이며, 유엔 안전보장회이사회 상임이사국이다. 두 국가는 역사적으로 같은 뿌리를 갖고 있으며, 인접국가로서의 점령과 통합, 분할을 반복했다. 최근 100년 이내의 역사에서도, 1922년 러시아가 소비에트연방에 우크라이나를 편입했고,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독립했다. 2년 전, 강대국인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뿌리를 같이하는 인접국 우크라이나를 불법 기습 침략했다.

한국은 70여 년 전 참혹한 전쟁을 겪고 분단의 상흔을 간직하고 있는 입장에서 2년째 참혹한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남의 일 같지 않다.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커다란 유사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유사점은 지정학적 중간국가라는 점이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중국 대륙세력과 일본을 비롯한 해양세력의 끊임없는 침략을 겪어 왔다. 우크라이나 또한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이 강할 때나 러시아 세력이 확장할 때 공히 전쟁의 참화를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국이 우크라이나와의 차이점은 동맹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70여 년 전 세계 최강인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었다.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전쟁 위협이 높은 한반도에 동맹인 미군이 주둔해 있고, 연례적으로 연합훈련을 숙달하는 등 견고한 동맹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정학적 특성상 주변 강대국의 위협을 느끼고 뒤늦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고자 했으나 러시아가 이를 전쟁으로 제지한 것이다.

러-우전쟁의 진행과 6·25전쟁의 비교

러-우전쟁은 6·25전쟁과는 70년이라는 시간적 거리를 넘어 지정학적 중간지대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그 시사점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단기속결전’을 전제로 한 전쟁이 ‘장기소모전’으로 전환된 점이다. 러시아는 최초 10여만 명의 훈련을 가장한 병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삼면에서 전개했고, 푸틴 대통령은 전쟁이 아닌, 특별 군사작전을 선포했다. 그러나 전쟁은 러시아 의도대로 전개되지 않았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나토라는 집단안보체제로 전쟁에 개입하면서 장기소모전 양상이 되었다. 6·25전쟁도 북한 김일성이 사전 준비된 월등한 전력을 바탕으로 기습 공격하여 단기간에 전 한반도를 석권하고자 했으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참전함으로써 3년간의 장기소모전이 되었다.

둘째, 전장의 범위와 전쟁 수단 면에서의 제한전이라는 점이다. 러-우전쟁은 우크라이나의 영토에서만 한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핵무기를 가진 러시아가 그렇지 못한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후 때때로 핵무기 사용을 위협 했으나, 지금까지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미국과 나토국가들도 무기와 전쟁물자는 지원하지만 전투병 파병은 제한함으로써 전장의 확대를 한정하고 있다. 6·25전쟁 시 미국도 핵무기를 중국 동북지역에 사용하여 개입 차단을 검토했으나, 제3차 세계대전으로의 확전을 우려하여 한반도 내에서의 재래식전쟁으로 한정했다.

셋째, 두 전쟁은 당사국 중심에서 국제대리전 양상으로 확대되었다. 러-우전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을 저지하고, 동부지역의 러시아 영토 확대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일으켰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중심 나토회원국의 무기 및 전쟁물자를 지원함으로써 대리전·국제전 양상을 띠고 있다. 6·25전쟁은 소련의 사주와 중공의 지원을 받은 북한 김일성이 한반도를 공산화하고자 일으킨 전쟁이었다. 그러나 6·25전쟁은 미국 중심의 유엔사령부와 중국 인민지원군 개입으로 대리전·국제전으로 확대되었다.

러-우전쟁의 향후 전망과 한반도 안보의 시사점

러-우전쟁이 20개월째 진행되던 2023년 10월 7일, 중동에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세계는 두 지역에서 전쟁을 치루고 있다.

러-우전쟁이 장기화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던 국가들이 피로감을 호소하던 차에

석유수출의 중심인 중동에서의 전쟁은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이로 인해 러-우전쟁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져 ‘잊힌 전쟁’이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현실적으로 2년 동안의 전쟁 피해가 막대하고 외국의 무기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태에 있다. 따라서 전세를 획기적으로 역전하여 전쟁이전의 상태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 러시아 또한 강대국이긴 하지만 추가적인 병력동원이나 경제적 위축 등으로 최초의 전쟁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운 상태에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러-우전쟁의 탈출구를 1950년대 한반도식 모델의 정전협정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안드레아스 클루스가 미국 블룸버그통신에 실은 칼럼에 기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크라이나전선은 1952년 한반도 전선과 유사하며, 양쪽 모두 전쟁을 지속하기 어렵고 사상자와 큰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도 큰 이득을 얻을 수 없는 상황”으로 분석했다. 클루스는 “이번 전쟁의 유일한 출구 전략은 1953년 한반도에서와 마찬가지로 평화조약이 아닌 휴전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러시아의 입장은 전쟁초기에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을 내어줄 수 없으며 현 점령지역을 기준으로 완충지대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지에서 물러나고 러시아 지역에 비무장지대 설치를 주장하고 있어 공통분모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식 정전 모델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먼저 양측이 전쟁을 멈춘 뒤 일정 지대에 비무장지대를 설치하고 점진적으로 종전협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의 반대편에서 진행되고 있는 러-우전쟁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한국은 미국의 우방으로 우크라이나에 전쟁물자와 의약품을 지원하였고, 북한은 러시아에 부족한 탄약과 미사일 등의 무기를 제공하여 직·간접적으로 전쟁에 관여하고 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지켜보면서, 70여 년 전의 6·25전쟁이나 2024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러-우전쟁 역시 개별국가 혼자 힘으로는 전쟁을 수행할 수도 승리할 수도 없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한국은 핵으로 무장한 직접적인 위협세력인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이 ‘힘에 의한 평화’를 준비하고 한미동맹을 소중하게 여기며 미래지향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다. 2024년 올해 지구상에서 목격하게 될지도 모르는 참상은 지정학적 중간 국가인 우크라이나가 강대국의 불법 침략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영토가 점령당한 채 종전이 아닌 정전을 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70여 년 전의 이념 전쟁으로 인해 분단이 고착된 평화를 지켜내며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 국민으로서 러-우전쟁을 지켜보는 시각이 착잡하기만 한 이유다.

재향군인회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제언

이 종 섭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논문심사위원)

(동국대학교 연구교수)

최근 세계적으로 국가와 국가간, 지역간 전쟁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2년이 경과되고 아직도 전쟁중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지난해 10월 7일 갑자기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벌어지는 전쟁 양상들에서 인명 경시와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학살이 자행되는 등 전쟁 범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나의 가족들과 대한민국 안위와 전쟁의 공포가 아직도 남아있는 어언 74년전의 6.25 전쟁이 되살아 난다. 전쟁 발생시 우리의 대한민국 시민들을 지키는 이는 누구인가? 군인들이 최전방을 사수하고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지만 후방에서 발생하는 전투에서의 무고한 시민들을 지키는 이는 누가 될 것인가? 그들은 재향군인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대에서의 교육훈련을 받고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신중년 세대들인 그들이 시민들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국토를 수호하는 국군을 도와서 대한민국 지킴이가 되어야 한다. 최근 시니어층에서 일부 자발적인 단체로 탄생한 '시니어아미(ARMY)'에 대해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시니어는 보통 60세 이상의 노인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그러나 연령에 따라 정확한 범위는 사회적, 문화적 차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65세 이상을 시니어로 정의하고 있다. 시니어는 고령화 사회에서 경제, 사회 및 건강 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는 그룹을 가리킨다.

시니어아미 조직으로 활동하는 사례로는 일본의 "Kōreisha-Army"가 있다. 이는 시니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등록하여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아래는 Kōreisha-Army의 일부 활동 사례이다.

1. 도로 안전 활동 : Kōreisha-Army는 도로 교통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보행자 횡단보도 주변에서 시니어 시민들이 교통 정리 및 안내 역할을 수행하고 사람들의 안전한 횡단 보조 및 교통 사고 예방에 기여한다.
2. 범죄 예방 활동 : Kōreisha-Army는 지역에서 범죄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경찰과 협력하여 사회 감시 및 관찰 활동을 수행한다. 시니어 시민들이 동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예의주시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을 보고한다.

3. 화재 예방 활동 : Kōreisha-Army는 화재 예방을 위한 역할도 수행한다. 공공시설이나 주택에서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경우 정확하고 빠른 대응을 통해 화재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한다.

4. 지역 복지 활동 : Kōreisha-Army는 지역 복지 활동에도 참여한다. 이들은 도서관, 병원, 어르신 복지시설 등 지역 내 다양한 시설에서 자원봉사를 제공하며, 어르신들의 생활을 돕고 사회적 활동을 지원한다.

이처럼 Kōreisha-Army를 비롯한 시니어아미 조직은 시니어 시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유익한 역할을 수행하며, 안전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시니어에 준하는 세대에 대해서 신중년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하였는데 신중년은 일반적으로 40세에서 60세 사이의 연령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는 젊은 성인에서 노인으로의 전환 기간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연령 분류는 문화, 사회 및 학문적인 차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신중년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인 성숙과 사회적인 책임, 가족의 주요 관심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시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유지, 자녀의 양육, 경력 개발 및 관리, 건강 문제 등 다양한 도전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신중년은 개인의 체력, 정신 건강, 사회적 관계 및 경제적 안정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기간은 종종 개인의 관심사와 가치관, 목표를 다시 조정하고 재평가하는 기회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현상에 대응하고 현존 최고 역량을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 전국적인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재향군인회’가 미래를 대비해서 추진할 발전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이기에 다음과 같은 미래 발전 전략을 몇가지 제안해 본다.

1. 재향군인의 복지 지원 강화 :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에서 복역한 재향군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주거, 교육, 건강관리 등에서의 복지 혜택 제공 등을 강화해야 한다.

2. 책임 있는 재향군인 관리 체계 구축 : 재향군인들의 사후관리를 체계화하여 심리적,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기간 복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손상을 입은 군인들에게 건강관리와 심리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

선진 미국의 재향군인에 대한 정책들을 벤치마킹하여 과감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3. 재취업 및 창업 지원 : 전역 후 재향군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취업 및 창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경력개발 교육과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더욱더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4. 재향군인 인권 보호체계 구축 : 재향군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과 규정

을 개선해야 한다. 재향군인들의 병역기간 동안의 인권 침해사례를 예방하고 규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재향군인들의 평생 신문고 같은 제도가 있어야 한다.

5. 재향군인들의 사회통합 지원 :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재향군인들을 위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취업, 교육, 주거 등에서의 혜택을 제공하고, 본인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필자가 보훈처 연구 용역으로 연구하였던 제대군인들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군 복무 전·후에 대한 개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함께 주특기를 통해서 사회 직무와 연계될 수 있도록 개인별 역량에 대한 자기 주도 개발이 되도록 다양한 기회 제공과 지속적인 역량 관리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6. 재향군인들의 사회공헌 활동 확대 : 재향군인들에게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군인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장려하고,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위의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실행하면서 재향군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의 미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 정부의 의사 인력 확충에 따른 의료 정책에 반발하여 전문의 70%가 병원을 떠나는 극한 투쟁 등 사회적 갈등 고조로 인한 사회 분열과 여야간 대치에 따른 정치 혐오 현상을 타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재향군인들의 사회적인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 그러한 사회통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몇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1. 전문 교육 및 기술 교육 제공 : 재향군인들에게 전문 교육과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새로운 직업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재취업 및 창업 기회를 늘릴 수 있으며, 사회에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2. 취업 지원 및 시설 제공 : 재향군인들에게 적합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취업 활동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취업 정보 제공, 취업 지원금 지급, 취업 매칭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행하여 재향군인들의 취업률을 향상시킨다. 또한, 취업시설을 마련하여 취업 활동을 지원한다.

3. 사회 복지 혜택 제공 : 재향군인들에게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여 그들의 생활 안정을

도와야 한다. 예를 들어, 주거지원, 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을 제공하여 재향군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야 한다.

4. 문화, 스포츠, 예술 등의 활동 지원 : 재향군인들에게 문화, 스포츠, 예술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문화적, 예술적인 적응을 돕는다.
5. 정서적, 심리적 지원 : 재향군인들의 정서적, 심리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서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정신적인 상담과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나 센터를 마련하여 재향군인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한다.
6. 지속적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 재향군인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회와 재향군인들의 유대감을 형성한다. 이를 통해 재향군인들이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위의 방안을 종합적으로 실행하면서 재향군인들의 사회통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회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1. 도서나 잡지 등을 기부하는 독서 캠페인 : 도서관, 독거노인센터, 어린이집 등에 도서나 잡지 등을 기부하여 독서 환경을 개선하고, 문화 교육을 지원하는 활동이다. 도서나 잡지를 기증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고, 기증을 받을 수 있는 곳도 함께 찾아보라.
2. 환경 정화 캠페인 : 도시의 공원, 해변, 산 등을 정리하고, 쓰레기 처리 시설을 모니터링 하여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이다. 동네 사회센터와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민 모임을 구성하는 것을 고려해 보라.
3. 기부 캠페인 : 물품 혹은 금전 기부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활동이다. 기부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고,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단체나 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기부 캠페인을 진행해보라.
4. 지역사회 봉사활동 : 이웃의 필요에 맞게 봉사활동을 진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어린이 집이나 독거노인을 찾아가서 도움을 주는 등 지역사회의 특정 그룹을 지원하고, 필요한 봉사활동을 탐색해 보라.
5. 멘토링 프로그램 :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학습, 진로,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들이 성장과 발전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대학교와 연계하여 멘토로 참여하고, 다양한 멘토링 세미나나 워크숍을 개최하여 대상에게 도움을 주도록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통해서 맑은 사회를 유지할 책임과 역할이 기대되는 재향군인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이제는 재향군인회가 나서야 한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문 의

• 안보전략논단 담당

02)499-0201/korvass0201@naver.com